

Business Focus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August 2025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hyojungle@kr.kpmg.com

김규림 상무
gyulimkim@kr.kpmg.com

박도휘 이사
dohwipark@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nkim15@kr.kpmg.com

김수경 수석연구원
sookyoungkim@kr.kpmg.com

차윤지 책임연구원
yoonjicha@kr.kpmg.com

최창환 책임연구원
changhwanchoi@kr.kpmg.com

정미주 책임연구원
mijujung@kr.kpmg.com

노승환 책임연구원
seunghwanroh@kr.kpmg.com

류승희 책임연구원
seungheeryu@kr.kpmg.com

이아름 선임연구원
alee65@kr.kpmg.com

이종민 선임연구원
jlee547@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 키워드 'J.M.N.O.M.I.C.S'



J obs 고용 확대와 노동의 상생 기반 마련
• 노동 존중 사회, 노동자의 삶과 질 향상 및 일자리 분배

M arket 실용적 시장주의
•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공정 경쟁 촉진

N ew-Tech 미래 성장 위한 첨단산업 집중 육성과 투자 촉진
• 반도체, AI,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 집중 지원

O utlay 확장적 재정의 전략적 운용
• 국가 재정을 경기 회복과 중장기 구조 전환의 마중물로 활용

M utual 공정 경쟁과 동반성장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공정 거래질서 확립

I nvestment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등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식시장 활력 제고, 벤처투자 활성화

C limate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본격화
•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이행 및 탄소중립 산업 전환

S upply Chain 핵심 소재·부품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 핵심 광물 및 에너지 확보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Image Source: 대한민국 대통령실

Contents

I.	새정부 국정 비전과 방향	3
II.	새정부 주요 경제산업 정책	8
III.	산업별 주요 정책과 영향	15
IV.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32

새 정부, 중도 실용주의 기반 경제·산업 대도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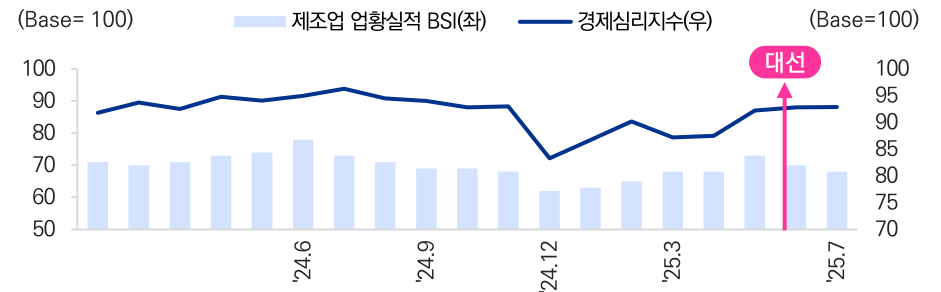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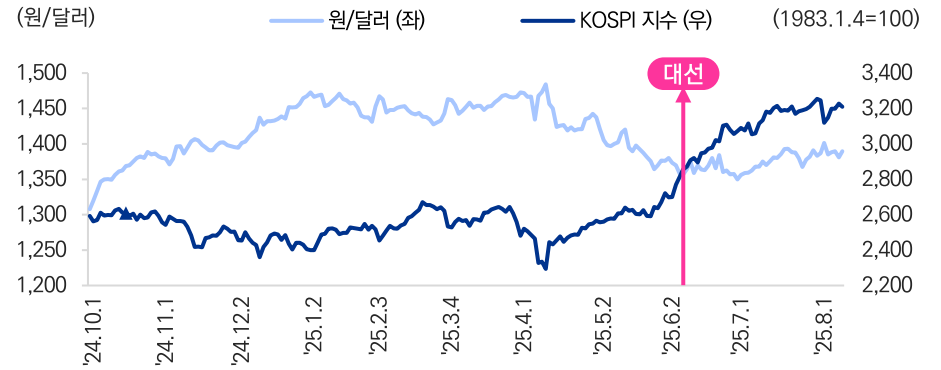
중도 실용주의 기반 경제·산업 성장에 방점을 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2025.6.3) 이후 국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양상. 민생안정을 위한 확장 재정과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주도 투자 정책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 증가

정부별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

분야	19대 문재인 정부 (2017~2022)	20대 윤석열 정부 (2022~2025)	21대 이재명 정부 (2025~)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민간주도 성장 건전 재정 생산적 복지	정부 주도 성장 적극적 재정 공정 경제
노동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안전망 강화	노동권 강화 노동시장 혁신
외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균형 외교 다자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경제안보 강화
복지	문재인케어,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	포용적 기본사회 민생중심 복지
에너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폐기·원전 강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및 신산업 육성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규제	시장 기능 회복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 및 시장 안정 지역균형 발전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요 경제지표



Source: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Note: 업황실적 BSI는 「좋은」 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 응답업체 구성비(%) + 100/
경제심리지수는 100 이상이면 경제주체들이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

새 정부, 5대 국정목표를 위한 123대 국정과제

국정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5대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 전략 (23개)	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②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③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① AI 3대 강국 도약 ②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③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④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⑤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②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③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④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② 내 삶을 돌보는 복지 ③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⑤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⑥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⑦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⑧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②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③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국정과제 (123개)	19개	29개	23개	37개	15개
실천과제 (564개)	79개	137개	113개	173개	62개

Source: 국정기획위원회(2025.8.13) '대국민 보고대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새 정부, 기술선도·모두의·공정한 대한민국 성장 도모

정부는 5대 국정목표에 따른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17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 증가요소 등을 포함하여 재정투자계획을 총 210조 원으로 발표. 국정과제 중 다부처·다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 과제이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제시

5대 국정목표에 따른 재정 소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54조 원

- AI 3대 강국
- 산업 르네상스 등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60조 원

- 자치 분권 기반 균형성장
-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등

기본이 튼튼한 사회 57조 원

- 내 삶을 돌보는 복지
- 인구위기 극복 등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6.5조 원

- 자연차·현장공무원, 군장병 처우개선
-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

- 1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 2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 3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 4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 5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 6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 7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 8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 9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 10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 11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
- 12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Source: 국정기획위원회(2025.8.13) '대국민 보고대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국정기획위원회(2025.8.13) '대국민 보고대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참고] 실용주의 국정 운영을 목표로 '능력' 중심 1기 내각 구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과 효능감, 개혁과 안정 간 균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주의 기업인 등을 전진 배치. 각 부처는 국내 주력산업 및 관광, K-콘텐츠 등의 AI 연계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육성 등 한국의 신성장동력 마련에 중점을 두며 정책을 실행할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 전 LG전자 LG사이언스파크 AI추진단장
- 전 LG AI연구원장

- ✓ 4대 정책방향으로 ① AI 생태계 구축, ②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 복원, ③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④ 국민생활 밀접 과제 추진 제시
- ✓ AI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AI 전환(AX) 및 AI 반도체 지원 등을 강조

대통령실 시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하정우

- 전 네이버 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 ✓ 한국의 '소버린 AI'를 강조하며, 한국형 대형 언어모델(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AI 생태계 활성화 도모
- ✓ 국방과 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통한 공공 부문 'AI 대전환(AX)' 추진
- ✓ 미국 백악관 OSTP 등과 AI 및 과학기술 협력 논의 진행 등 글로벌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 전 네이버 대표이사
- 전 네이버 고문

- ✓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디지털·AI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 '진짜 성장' 도모
- ✓ 민간 자금의 벤처 투자 확대와 모태펀드 존속 기간 연장 등 벤처 생태계 강화 추진
- ✓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약속 및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 전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 전 두산경영연구원 대표이사
- 전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

-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산업 균형발전, 전략적 국익 극대화라는 3대 방향 하 정책 추진 강조
- ✓ 산업·에너지·통상 정책 간 유기적 연계와 AI·에너지 혁명에 대한 선제 대응 도모
-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 역량 강화 및 안전성과 수용성에 바탕한 원전 정책 중요성 강조
- ✓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실용적 통상 정책 추진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취영

- '트리플' 창업
- 전 인터파크·아놀자플랫폼 계열 통합법인 '놀유니버스' 공동대표

- ✓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척을 목표로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
- ✓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 등 산업 전 단계에 AI 활용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 문화 인프라 확대 및 체육 참여 기반 확충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
- ✓ 방한 관광 3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K-관광 전략과 생태계 혁신, 디지털 및 AI 기반 관광산업 육성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I.	새정부 국정 비전과 방향	3
II.	새정부 주요 경제산업 정책	8
III.	산업별 주요 정책과 영향	15
IV.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32

21대 정부,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 및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주요 경제·산업 정책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정책 01

확장적 재정

- 민생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중시
- 재정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산업에 대대적 재정투자 계획
- 재정운용 원칙은 확장재정으로 변경, 재정준칙은 GDP 4~5%로 완화 가능

정책 02

미래전략산업 ABCDE

- 첨단산업 ABCDE(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우주항공·에너지)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
- ABCDE 첨단산업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미래 성장동력 창출. 기업 디지털 전환(AI·로봇 등 활용) 및 첨단산업 국내 생산 지원 확대

정책 03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회 3% 룰 보완,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요건 강화 등 추진
-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제도 도입 및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거버넌스 구조 정립

정책 04

탄소중립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법제 정비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전망.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상 중
- 전력 수요 증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발전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단계별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 05

통상 및 공급망

- 경제안보 중심의 글로벌 통상 전략 및 공급망 협력 강화, 산업 기반 공급망 내재화 및 무역구조 혁신
-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강화 및 위기 대응 체계 확보, 핵심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및 공급망 내재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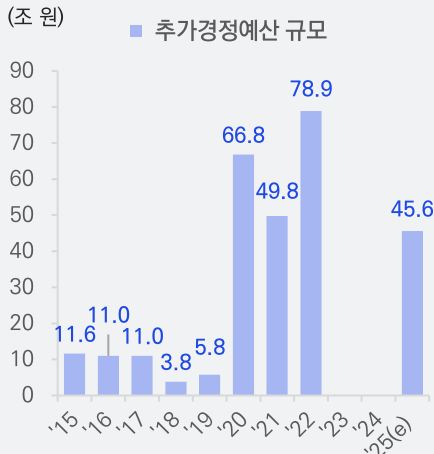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Image Source: 대한민국 대통령실

주요 경제정책 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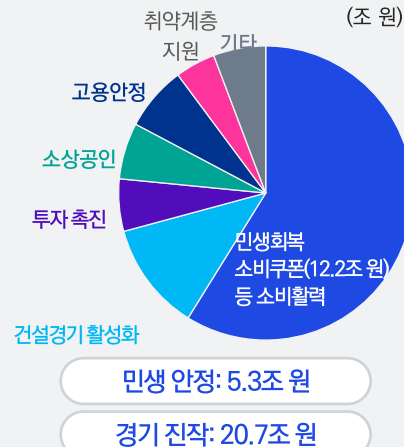
경기·민생여건의 회복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집행 추진

- 새정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및 연내 신속 집행 예정
 - 새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
 - 2025년 5월 1일 1차 추경(13.8조 원) 편성 후 동년 6월 19일 31.8조 원의 추경 의결·확정. 이 중 20.7조 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 및 3개월 내 85% 이상 집행 추진 예정
 -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전제품 구매 환급 등 2025년 7~8월 중 시행.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위한 채무조정 기구 설립 등 추진

추경 편성 규모 추이



'25년 제2차 추경예산 집행 계획



Source: 기획재정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25년 2차 추경예산 중 10.3조 원은 세입경정

단기적 내수 촉진 및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위한 재정 역할

- 내수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 도모
 - 재정 주도 성장 전략 일환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투자 방안 제시.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기본사회 구현
 - 재정운용 원칙을 확장재정으로 변경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허용 한도를 4~5%로 완화
 - 자원 마련을 위해 낭비·중복성 예산 구조조정과 법인세율 24%에서 25%로 인상,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한시적 상향 조정 등 세법 개정

영향

- 내수 경기 반동,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성장률 제고
 - 서비스업, 소비자 산업 등 내수와 연계된 기업 실적 개선
 - 벤처투자, 기업 R&D 활동 활성화 등 정부 재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나, 이는 실물경제에 점진적 반영
- 대기업 중심 세 부담 증가 및 투자 위축과 세후 이익 감소 가능
 -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 중심으로 일부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투자재원 축소, 배당 어려움 감소 등 부정적 영향 가능성 상존
- 재정 건전성을 고려 시, 전략산업 투자분에 대한 핀셋식 감세 정책 추진 전망
 - 근로세, 상속세, 부동산세 등은 공제 확대 등 병행 가능하며, 생활 밀착형 공제 확대로 일부 중산층 부담 완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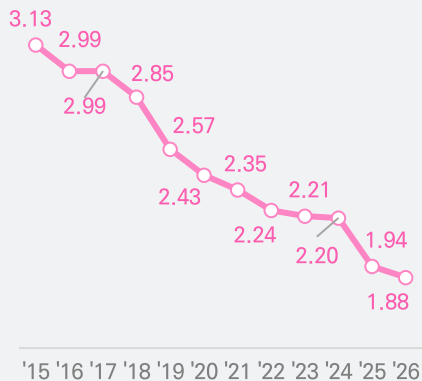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요 경제정책 ② 미래전략산업 ABCDE(AI·Bio·Contents·Defense·Energy)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구조적 저성장 돌파 전략 모색

- ▶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25년 6월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 1%대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
 - 한국의 잠재성장을 하락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기술 혁신 둔화 및 총요소생산성(TFP) 정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 축소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새정부는 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등을 주요 성장엔진으로 삼고, 전략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을 강화해 집중 육성할 계획 발표

OECD 추정 한국 잠재성장률



새정부 추진 첨단산업 분야

- A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전략 투자
- B 바이오: 글로벌 5대 경쟁력 확보
- C 문화콘텐츠: 예산 및 정책 지원 확대
- D 방산우주항공: 첨단 R&D 강화
- E 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Source: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5),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 창출을 위한 인프라 공급 지원

- ▶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 대상 투자 지원
 -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정책을 통한 국가 컴퓨팅센터 구축, 공공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무상 제공 등 AI 혁신 지원 인프라 투자 계획
 -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 기술 기반 성장동력 마련
- ▶ 첨단산업 혁신을 중심으로 한 'K-이니셔티브'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추진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육성 및 조성 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지원
 -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지원 확대 전망

영향

- ✔ 첨단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 마련에 정책적 지원 활용
 -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 전력 등 주요 인프라 자원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 활용 가능 자원의 확대 전망
- ✔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노력
 - 주력 산업의 첨단화 지원으로 기술 혁신 생태계 토대 마련 등 미래 경쟁력 강화
 - 빅데이터, AI 등의 활용 역량 육성을 통한 디지털 전환 및 AI 전환(AI) 수요 확대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요 경제정책 ③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7.3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에 방점

상법 개정안 항목	주요 내용	기업 대응 방향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 주주까지 명시적 포함·확대	-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 -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	- 주주 간 이해상충 위험이 있는 거래에 대한 엄격한 검토 및 심사 -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 구축
② 독립이사 제도 강화	-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	독립이사의 구성, 담당역할 및 이사회 운영 재점검
③ 감사위원회 3% 룰 보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 제한	주주와의 소통 채널 강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주주 참여 독려
④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도입 -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인 조치에 관한 준비

Source: 법제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2025.7.15),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합리적 기업지배구조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요건 강화 등

- 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기관투자자 역할 확대
- ②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배정 제도화
- ③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제도 도입과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거버넌스 구조 개혁
- ④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근거 마련 및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합리적 규제

영향

✔ 이사회 운영 및 내부통제 강화

-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상 주주 전체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한 접근 방법 개발
-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사전 식별 및 리스크 최소화, 기업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고려한 이사회 구성, 내부통제시스템 실효성 점검

✔ 자사주 보유 전략 및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의 대안 마련, 주주 소통 채널 다각화

✔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 등 사전적 조치 필요

-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활성화 및 주주권 행사 확대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요 경제정책 ④ 탄소중립

법·제도 정비와 인프라 투자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추진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및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 탄소중립기본법은 2024년 8월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한 개정 논의 필요. 또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산업과 정부의 정책 연계 방안도 마련 필요
-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탄소배출권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현 수단이 되도록 재정비

▼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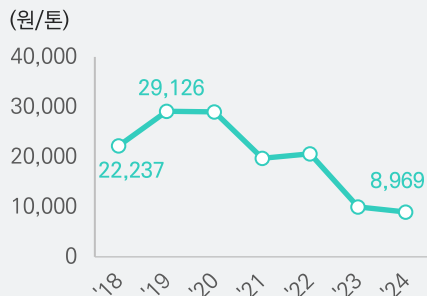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추진
-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

탄소중립기본법안 체계와 현황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분야	온실 가스	기후 위기 적응	정의 로운 전환	녹색 성장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24.08) → 개정 준비

국내 탄소배출권 연평균 가격 추이



Source: 탄소중립 정책포털, 환경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배출권 시장 정보플랫폼, 국회예산정책처
Note: 탄소배출권 2024년 가격은 10월까지 가격
대상

에너지 전환 기반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조직 개편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는 기조는 명확

- 에너지, 기후 정책 관련 조직 개편안은 내부 검토 중 (2025년 8월 13일 기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제도 마련

▼ 전력 수요 증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마련

- RE100 산업단지 지정 및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추진
-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 산업 기반 마련 및 경쟁력 확보

영향

✓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명확한 기조로 인해 에너지 전환 속도 가속화

-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 부문은 탄소배출권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탄소배출권 거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전기차,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전환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수 있어, 기업은 정부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재생에너지 발전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단계별 관련 산업 활성화

-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고압 전력 수송을 위한 케이블, 주로 직류 시스템인 재생에너지와 교류 시스템으로 구성된 현재 전력망 간 호환을 위한 기술 등의 산업 활성화 전망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주요 경제정책 ⑤ 통상 및 공급망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과 리스크 확대

경제안보 강화 속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및 통상 질서 변화 가속화

- 지정학적 갈등, 기후 변화, 기술 리스크 확산에 따라 주요국들이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에 나서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변화하고 있음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나타내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는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주요 해상 물류 대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류비 상승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 요인

미·중 전략경쟁

- 양국 간의 무역, 기술, 특히 반도체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 격화

지정학적 갈등

- 러·우 전쟁,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공급 불안정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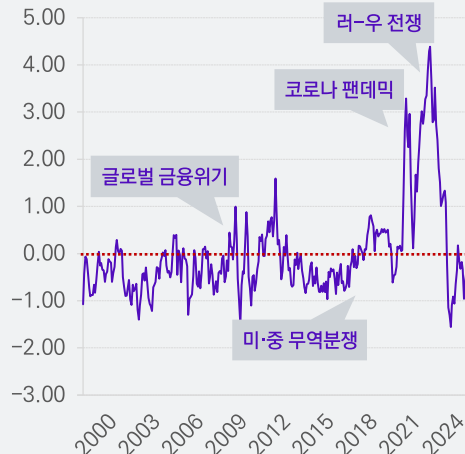
에너지·자원, 기술 안보

- 에너지(석유·가스), 첨단기술, 중요자원(희토류) 확보 경쟁 심화

기후 변화와 환경

- 기후 변화로 특정 지역의 농업 생산성 저하, 인프라 파괴, 이주 등으로 경제적 손실 발생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추이(1998~2024)



Sourc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지수 0은 과거 평균값을 의미, 0 이상이면 공급망 압력 심화, 0 미만이면 공급망 압력 완화를 나타냄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 및 통상 구조 혁신

경제안보 중심의 글로벌 통상 전략 및 공급망 협력 강화

- G20, APEC, IPEF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공급망 연대 강화 및 핵심 소재·광물 확보 추진
- 공급망 안정성과 물류 대응을 외교·안보 전략에 통합하고, 국적선박 확보와 조기경보 체계로 위기 대응력 강화

산업 기반 공급망 내재화 및 무역구조 혁신

-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 전략적 통상 정책 추진
- 전략산업 국내 생산 유인 세제 도입을 통해 제조업 공급망의 국내 회귀 및 자립 기반 강화

영향

✓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강화 및 위기 대응 체계 확보

- 다자 협력과 외교·안보 연계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및 전략자원 확보력 제고
- 조기경보 시스템과 국적선박 기반 확충으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향상

✓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공급망 자립 기반 구축

- 전략산업 국내 생산 유인으로 핵심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및 공급망 내재화 촉진
- 무역구조 다변화와 탄소중립·기후 대응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 확보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I.	새정부 국정 비전과 방향	3
II.	새정부 주요 경제산업 정책	8
III.	산업별 주요 정책과 영향	15
IV.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32

새정부 주요 정책과 산업별 영향 Overview



AI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위한 AX(인공지능 전환) 촉진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등 안정적 산업 토대 마련 추진



자동차

친환경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 본격화



방산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 목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바이오·헬스케어

전략적 R&D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통한 지역의료 강화



물류

물류 거점 강화전략을 통한 글로벌 물류 강국 도약 목표



조선

조선 경쟁력 약화, 친환경 전환과 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반등 모색



미디어·엔터테인먼트

K-컬처 시장 300조원 달성을 위한 정책 강화



관광

내·외국인 여행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 인력난 우려도 공존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 기반 마련



건설

침체된 국내 종합 건설산업의 회복과 안정화 추진 시급



외식

배달앱 관련 규제 도입 시 외식업체·배달앱·소비자 등에 영향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식시장 활력 제고 및 벤처금융 활성화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I(인공지능) 》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위한 AX(인공지능 전환) 촉진

AI 시장 2030년 1.6조 달러 전망...한국 AI는 세계 7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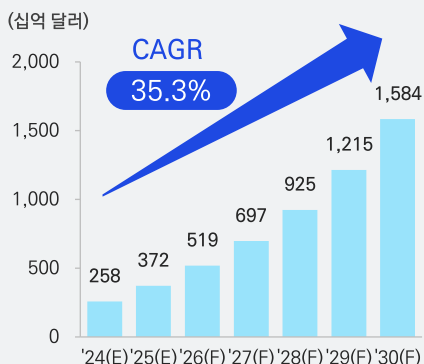
▶ AI는 데이터 분석·처리 등을 넘어 기업 비즈니스 및 소비자 생활 전반을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역할을 수행**

-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30년에는 약 1조 6천 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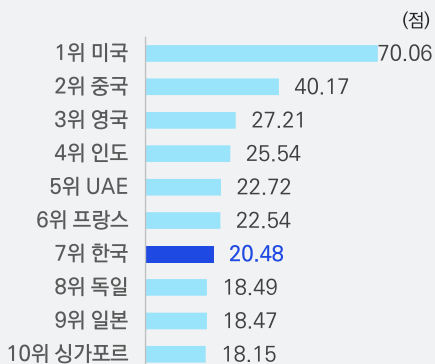
▶ 현재 한국 AI는 세계 7위 수준으로, 1위 미국·2위 중국과 격차가 있는 가운데, 3~6위권 국가보다 AI 경쟁 우위 확보하는 'AI 3강' 전략 추구

-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AI 기술 1위 미국, 2위 중국과의 현재 격차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황. 미국, 중국과 격차는 유지하면서 세계 3위권으로 도약하는 '격차 유지 전략' 등 전략이 논의 중

글로벌 AI 시장 규모 성장 전망



국가별 AI 활력도 순위 및 지수



Source: MarketsandMarkets, 스탠퍼드대 HAI(2023),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스탠퍼드 HAI(인간 중심 AI 연구소) 국가별 AI 활력도는 2023년 기준으로, 연구·개발, 책임 있는 AI, 경제, 교육, 다양성, 정책 및 거버넌스, 여론, 인프라 등 8가지 축을 기반으로 AI 생태계의 강점을 측정한 지표로, 순위는 절대값 기준 상위 10개 국

AI 시대, 25조 원 투입하여 기술 기반 성장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25조 원 투입, AI 국가인재 양성

-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25조 원 투입. AX(AI Transformation, AI 전환)를 추구하며, 기업과 국민 참여 전방위 AI 전략으로 확장하여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 목표

- 과학기술인재 지속 확보를 위해 청년과학기술인 지원, 석학 및 신진급 해외 인재 유치

▶ 고성능 GPU 5만 장 이상 확보 및 양질 데이터 확충 'AI 인프라' 구축

- 고성능 GPU 5만 장 이상 확보 및 양질 데이터의 조기 확충하는 등 AI 인프라 및 AI 생태계 구축 위한 기반 지원

-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목표. AI 데이터센터 건설 촉진

✓ 한국형 AI 개발 촉진 통한 '소버린 AI(Sovereign AI)' 추진 본격화

- AI 기술 개발 국가들이 추진 중인 '소버린 AI(Sovereign AI, 자주적·주권 AI)'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국가의 사회적 문제를 해당 국가의 사회 시스템과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버린 AI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 조성 전망

✓ AI 투자 활성화 및 AI 인프라(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 가속화

- AI 투입 자원 마련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존 규제(출자한도 제한, 해외 기업 투자 제한 등) 개선이 진행될지 모니터링 필요

- AI 차세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살펴봄에 기업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반도체 》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등 안정적 산업 토대 마련 추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급 유연성 및 기술력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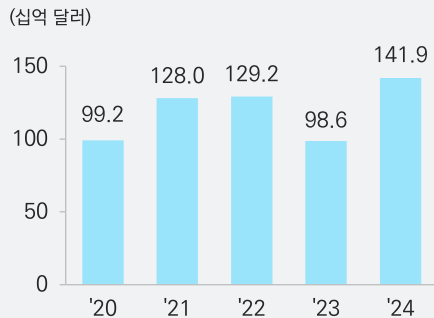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 분쟁이 지속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요 및 공급 유연성 확보 필요성 증대

- 미·중 반도체 공급망 분쟁, 반도체 관세 협상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 공급망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공급망 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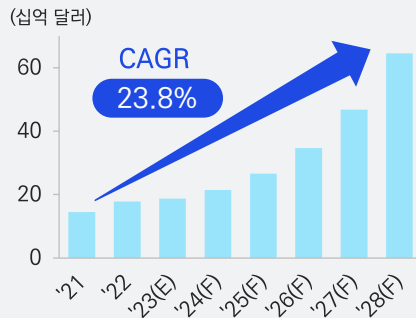
▶ AI 수요 확대에 따른 첨단반도체 기술 경쟁과 중국산 저가반도체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확대 노력이 이어지며 수요 확보 경쟁 심화

- AI 수요 확대에 따라 첨단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고부가반도체 시장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상
- 레거시 반도체(28나노 이상 공정) 분야에서 중국산 저가반도체와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짐에 따라 미·중 관세 협상 등에 따른 시장 변화 주목

연도별 국내 반도체 수출 규모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



Source: Statista, NIPA,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MarketsandMarke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안정적 산업 토대 마련 노력

▶ 반도체 생태계의 안정적 토대 마련을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및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클러스터 육성 추진

-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제품에 최대 10% 규모의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여 국내 공급망 체계 확대 도모
- 경기도 남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테스트 등 소·부·장 기업이 포함된 클러스터 조성 지원

▶ 국가 주도 AI 투자 등을 통한 첨단반도체 설계 기술 및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 지원 전망

-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K-팹리스(설계 중심의 반도체 기업) 밸리' 육성 등 AI 반도체 중심 신규 기업 육성 확대 추진
- 2나노미터 이하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지원과 함께 첨단 소·부·장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을 포함한 첨단 기술력 확보 도모

✓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선도를 위한 개발 지원을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확대 방안 모색

- AI 반도체 등 미래 수요가 기대되는 첨단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주요 반도체 전·후방 산업과 클러스터화를 통한 선제적 시장 확보 전략 도출 기대
- 소·부·장 클러스터 등 반도체 분야 전·후방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생태계 기업 간 유기적 연대를 통한 안정적 토대 마련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자동차 》 친환경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 본격화

전기차 전환 및 자율주행 시대 진입에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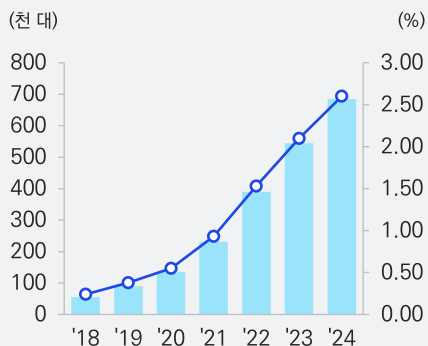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률은 2.6% 수준에 불과

- 2024년 12월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684,244대로 보급률 2.6% 기록
- 2024년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25.8% 성장했으나, 2022년 이후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지속 감소세
-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 정책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구축 필요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가운데,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는 시범 운영 상태를 답보

- 국내는 자율주행차가 제한된 구역과 시간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나 미국 및 중국은 이미 상용화 및 서비스 확산 단계 진입
- 지역과 시간을 한정할 경우 제한적인 데이터만 수집되어 활용 가치가 제한적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및 보급률



Source: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Note: 보급률은 전기차 등록대수/전체 등록대수

국내 vs. 미·중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현황

	시범 운영	완전 무인 주행 사실상 불가능
	상업적 운영	웨이모(미), 바이두(중) 등 완전 무인 주행 서비스 상용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친환경 자동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 기대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 전환 추진

- 전기차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현지화 전략, 외교적 협상, 통상 연대 등의 방안을 통해 적극 대응
- 충전 인프라 구축 및 K-배터리 산업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생태계 마련 가속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중심으로 산업 기반 재편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로 미래 모빌리티 육성
- 미래 모빌리티 대상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및 실증화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인프라 및 안전성 강화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 및 수소차 시장 기반 마련

- 전기차 보급률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므로 인프라 시장 도약 기대
-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입장벽 도입은 소비자 불안을 낮춰 전기차 보급에 기여
- 수소차의 경우 수소연료 보조금 지원 확대되며 국내 수소차 시장 활성화 가능할 전망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 자율주행 상용화 및 도심항공교통 실증 본격화

-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의 시간,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입지 마련 가능
-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및 솔루션 실증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확보 기대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방산 》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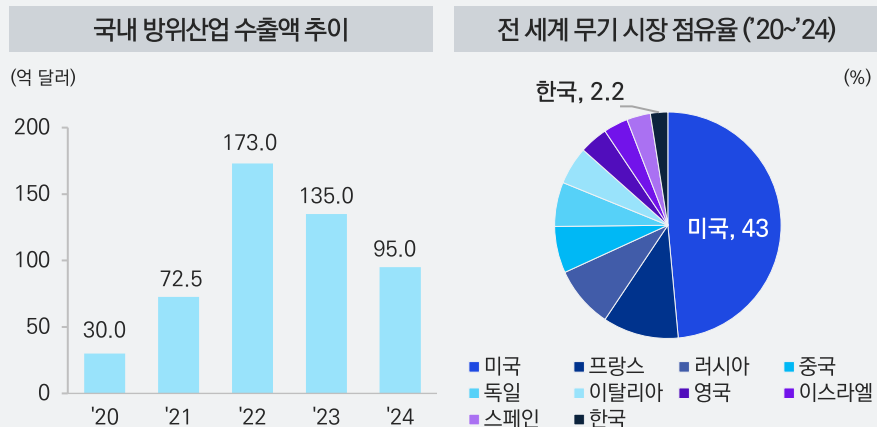
글로벌 방산 강국이 되기 위해 양적·질적 성장 동시 달성 필요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은 2년 연속 감소세나, 수출 대상국 다변화 및 수출 무기 품목 다양화를 통해 질적 성장 달성

- 2022년 173억 달러 수출했으나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 기록
- 2022년 폴란드가 전체의 72%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폴란드 외 국가 비중이 65%로 증가. 수출 무기도 탄약, 함정 중심에서 전투기, 자주포 등으로 다양화

K-방산의 전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은 2.2%로 상위 10위 기록

- 전 세계 무기 시장 중 43%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2.2% 수준
-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현재 2%대인 점유율을 4~5% 이상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본격 논의 중



Source: 방위사업청, 언론보도 종합

Sourc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글로벌 4강 도약을 위한 K-방산 경쟁력 강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기반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 강화

- 기존 방산 수출 지원 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유관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통합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 (2025.07 국무회의 지시 사항)
- 수출 정책, 외교 연계, 정책금융 지원 등을 일원화해 수행함으로써 기업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국가 차원의 방산 전략 실행력 확보. 이를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도입, 대형 사업 지연 문제 해결 기대.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안보 자강력 증진에도 기여 가능

방산 첨단전략산업 육성, 무기 획득체계 혁신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인공지능(AI), 드론, 첨단엔진, 국방우주 등 방위산업 내 첨단전략산업 육성 추진
-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식을 전통적 획득 절차에서 벗어나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신기술을 조기에 시범 배치하거나 기술성숙도가 확보된 체계는 실전 전력화 하는 방식으로 혁신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하여 방산 대·중소기업의 공정성장 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힘입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K-방산 위상 제고

-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AI 기반 무기체계(솔루션)로 수출 품목 확대 필요. 연구개발부터 구매국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까지 전방위적 정책 수립 기대
- 무기 외 MRO(유지·보수·정비) 경쟁력 강화해 쏘 밸류체인에 걸친 역량 확보 필요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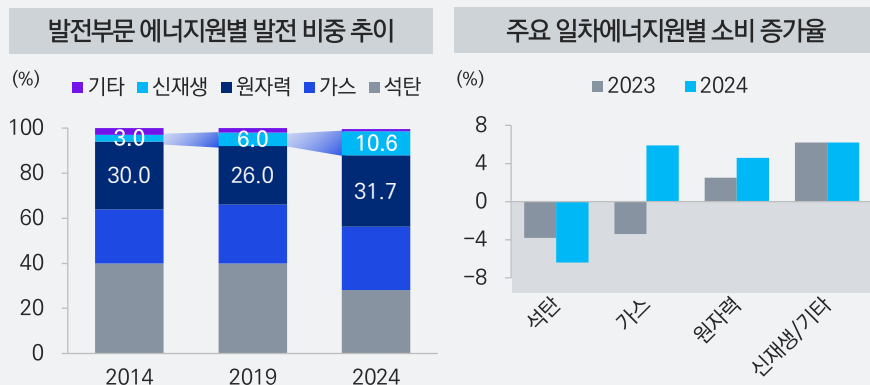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믹스 전략

2024년 발전 비중은 원자력 31.7%, 신재생에너지 10.6% 기록

- '24년 총 발전량은 595.6TWh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량이 188.8TWh(31.7%)를 차지하며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1위 기록
- 친환경 기조 확대와 원전 활용도 제고 등의 영향으로 기존 최대 발전원 석탄은 가스와 함께 공동 2위 기록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증가 등에 따라 발전 비중 10.6%를 차지하며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

석탄을 제외한 가스, 원자력, 신재생 등 일차에너지원 소비 증가

- '24년 총 일차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가운데, 석탄은 6.4% 하락하며 감소세 확대
- 반면, 가스는 5.9% 증가율로 반등하였고 원자력과 신재생/기타는 증가세 유지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강화 기조에 따라 전력 인프라 구조 전환 기대

해상풍력발전 지원,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전남·서남해·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하고, 해상풍력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 확보
- '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40년대 U자형 한반도(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경북 동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에너지 인프라 고도화
-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한 HVDC (초고압직류송전)를 적극 추진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추진

-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지역거점 확보

재생에너지 우호 정책에 따라 발전부터 활용까지 투자 및 수요 증가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인프라 고도화에 따라 태양광, 해상풍력 중심의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투자, 프로젝트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효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가·인프라 수요 증가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Smart Grid)까지 수혜 예상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V2G(Vehicle-to-Grid)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다시 보내 전력 공급에 활용하는 기술

바이오·헬스케어 》 R&D 기반 경쟁력 확보, 공공의료 통한 지역의료 강화

K-AI 신약개발 지원 본격화 및 의료 확충 필요성 대두

바이오

▶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K-AI 신약개발 지원 본격화

-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빅파마뿐만 아니라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후보물질 발굴 중심이거나, 대부분 전임상·1상에 머물며 초기 단계
-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넘어 임상진입 가속화, 약물 반응 예측 등 전주기 단계에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AI 기술 고도화 및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이 시급한 상황
-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Biobetter) 개발 및 실증, K-AI 전임상·임상 모델 개발 사업 등의 지원으로 AI 신약개발 범위가 전 주기적으로 확장될 전망

헬스케어

▶ 공공의료 비중 낮고 지역 격차 심화, 공공의료 확충 시급

-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음
- 민간의료 의존 심화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대두

OECD 주요 국가별, 공공의료 기관 및 병상수 현황 ('22년 기준, 개소,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기관수	계	4,252	8,156	6,120	2,976	2,001
	공공	222	1,511	1,374	1,338	2,001
	%	5.2%	18.5%	22.5%	45.0%	100%
병상수	계	663,099	1,573,939	916,752	374,290	165,070
	공공	63,129	436,905	193,224	228,687	165,070
	%	9.5%	27.8%	21.1%	61.1%	100%

Source: 보건복지부,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바이오베터는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효능, 안전성, 편의성 등을 개선한 의약품

K-바이오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

▶

전략적 R&D 투자·제도 개편, K-바이오 경쟁력 강화

-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 구축으로 성과 도출·공공환원형 중심의 지원 체계 강화
-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신약개발 전 주기 인프라 강화
-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 등을 통해 R&D 투자 견인 및 신약개발 조기 시장 진입 유도
-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신약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공공의대 설립과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 의료 혁신

- 인천·전북·전남 등 지역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전환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 공공의대 졸업생에게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복무제를 도입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
- 이를 통해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감염병·응급·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 추진

✓

R&D 주도 신약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

- R&D 투자 기반 강화로 기업별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및 기술 이전/라이선스 아웃 가능성 확대
- 약가 연계 인센티브 등 보상체계 개편으로 신약개발 참여 촉진 및 정밀의료/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 확대

✓

공공의료 확대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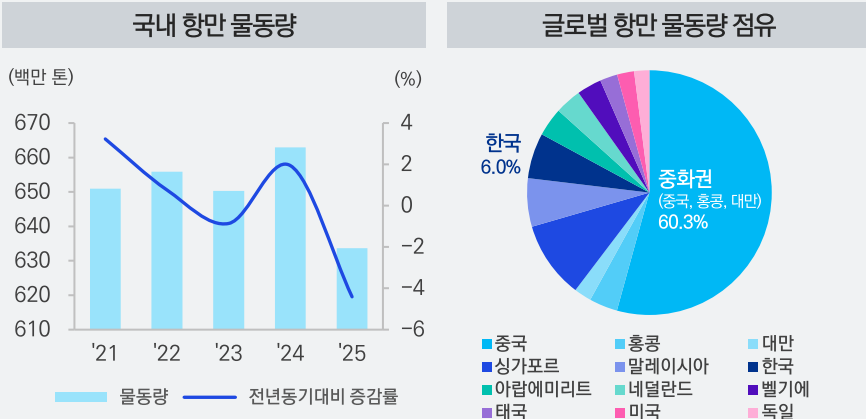
- 지역 병원·장비·의료IT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수요 증가
- 기피되던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물류 》 물류 거점 강화전략을 통한 글로벌 물류 강국 도약 목표

글로벌 해운 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필요

- ▶ '25년 국내 항만 물동량 최저치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1% 증감률
 - 국내 물류산업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해운업의 경쟁력 감소 우려
 - 국내 항만 물동량이 약 6억 3천만 톤을 기록하며 '25년에 급감
- ▶ 글로벌 해운 경쟁에 중화권 영향력이 확대되며 국내 물류 대응 필요
 - 글로벌 항만 물동량 상위 20개 항구 중,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국가가 점유하는 물동량이 60.3%에 달함
 - 단일 국가 기준, 항만 물동량 2위 국가인 싱가포르까지 합산할 경우 70.5%에 달하는 데 반해, 한국은 부산항의 물동량 점유율이 6.0%에 그침
 - 글로벌 물류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시급



Source: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World Shipping Council,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국내 항만 물동량은 연도별 1~5월까지의 실적을 집계

물류 거점 강화전략을 통한 국내 해운업 경쟁력 제고 기대

- ▶ 해양수산부 및 해운 기업 본사 이전을 통한 지역 거점기반 운영 추진
 - 해양수산부·HMM 등 주요 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 강국 수도'이자 컨트롤타워 거점으로 운영
 - 지역 거점내 해운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제도 개선 확대
- ▶ 물류 인프라 연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트라이포트' 전략을 추진
 - 부산을 항만(부산항, 진해신항)·항공(가덕신공항)·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
 - 부산을 거점으로 아시아·유럽 간 최단 물류 연계 북극항로 개척 참여 가능성 타진

- ✓ 부산을 거점으로 글로벌 물류 강국 도약 위한 인프라 기반 마련
 - 주요 해운·물류 정부기관 및 기업의 부산 이전을 통해 전·후방 산업이 연쇄적으로 거점 집중화되어 산업 경쟁력 제고 가속화 기대
 - 부산의 해운 거점화는 해운 전문인력 육성,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등 인적 자원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 ✓ 글로벌 물류 핵심 이슈에 대응하고 미래 물류 패권 경쟁력 강화
 - 북극항로 개척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부산에 투자공사를 설립 또는 주요 투자은행을 지정하여 신속한 업무수행과 투자지원 강화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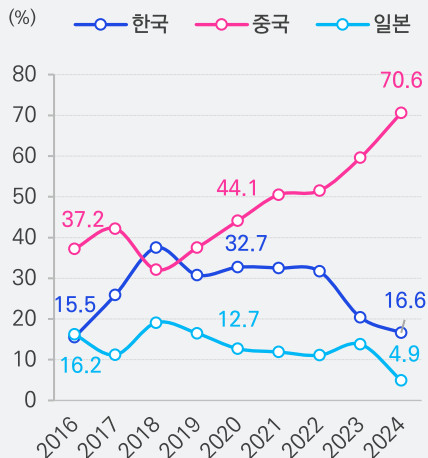
조선 》 조선 경쟁력 약화, 친환경 전환과 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반등 모색

조선산업 경쟁력 하락, 돌파구는 친환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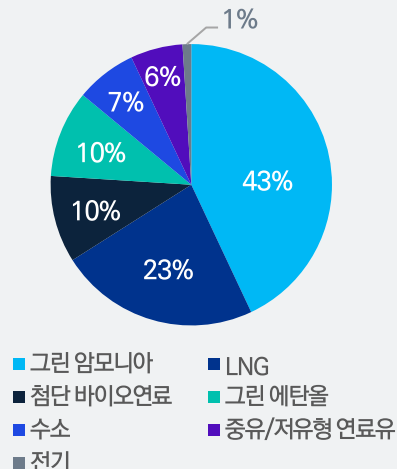
경쟁력 약화 국면, 친환경 전환이 조선산업 반등의 핵심

- 중국의 조선 수주 점유율은 2016년 37.2%에서 2024년 70.6%로 급등, 반면 한국은 2020년 32.7%에서 2024년 16.6%로 급락,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약화가 심화
- 국제 해운 업계는 2050년까지 그린 암모니아(43%), LNG(23%), 첨단 바이오연료(10%) 중심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예상되며, 탄소중립 기준 강화가 본격화
- 한국 조선산업은 기술 혁신과 친환경 선박 역량 강화가 필수이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 전환이 시급

한·중·일 3국의 수주 점유율 추이



해운 에너지원별 연료 구성 전망('50년 기준)



Source: 한국수출입은행, Statista,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해운 강국 실현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및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확대 및 특별보조금 도입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개조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고 ESG 지원펀드 및 친환경 선박 금융 프로그램 등 제도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
- 정책금융과 보조금을 연계한 특별금융상품 마련으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지원 체계를 정비
- 전기,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공급망 설계와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지역에서 수요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 활성화와 조선 경쟁력 제고 모색

국내 조선·해운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수주 경쟁력 및 생산 역량 강화, 스마트 조선소 전환 가속화
-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기술(LNG, 암모니아, 수소연료 등)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기술 리더십 확보

친환경 연료 및 기자재 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 연료 공급망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설계·엔지니어링·부품 등 연관 산업 밸류체인 확장으로 산업 기반 다변화
- 중소·중견기업과 전·후방 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 《K-컬처 시장 300조원 달성을 위한 정책 강화

국내 콘텐츠산업의 높아진 위상...도약 위한 전환 시점 도래

국내 콘텐츠산업은 매출과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성장 속도가 둔화되며 새로운 성장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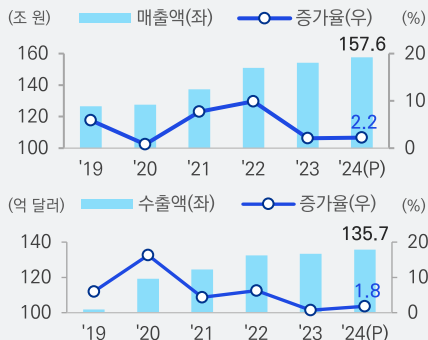
-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은 매출 157.6조 원(2.2%), 수출 135.7억 달러(1.8%)를 기록했으나, 둔화된 성장세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지속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적 대응과 자생력 제고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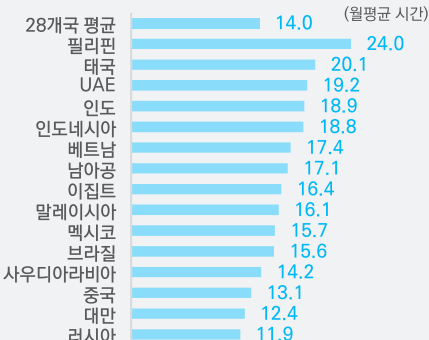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한국 문화콘텐츠의 평균 소비량은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 요구

- 국내 콘텐츠산업 내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생력 강화 노력 또한 중요

국내 콘텐츠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추이



국가별 한국 콘텐츠 평균 소비시간



Source: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P)는 추정치, 2) 국가별 한류 콘텐츠 평균 소비 비중은 2024년 11월 29일~12월 27일까지 해외 28개국 만 15~59세 현지인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26,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콘텐츠산업 국가전략화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육성

5대 문화강국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 문화콘텐츠(플랫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며,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을 구축하고,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등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확대

- K-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투자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 금융, 세제 지원 체계 확대

- 프로젝트 단위 및 사업자 간 투자·출자 지원 확대, AI 콘텐츠 등 신성장 원천기술 R&D 분야 지원 강화 등 정책금융 규모 및 적용 범위 확장

- 영상·음악·게임 등 핵심 장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공연·웹툰·출판·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보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기반 강화로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확산 전망

- 콘텐츠산업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대형 공연장 조성, 정책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전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AI 등 첨단기술 도입 지원 확대로 국내 콘텐츠산업 도약 가속화

- 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 AI 기술 R&D 지원 확대, 방송·미디어 전 과정 AI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관광 》 내·외국인 여행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 인력난 우려도 공존

중국발 관광 수요 회복 중 ... 내수 관광은 줄어드는 흐름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세이나 과거 대비 낮은 수준 유지

-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24년 460만 명으로 2019년 602만 명 대비 23.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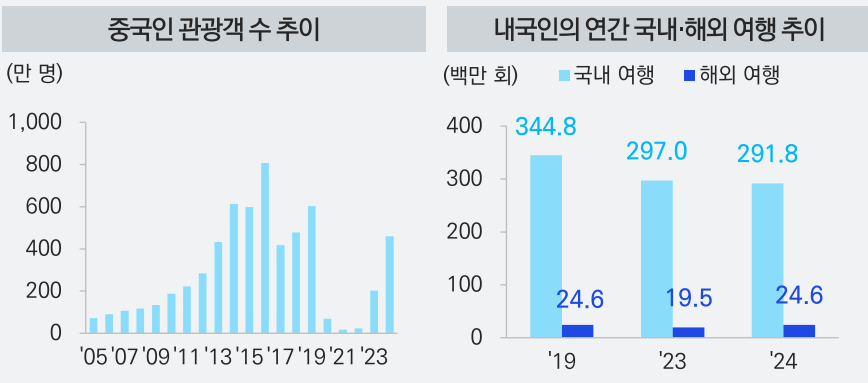
<참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한시 허용

- 정부는 방한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

내국인 국내 여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해외 여행은 소폭 증가

- 내국인의 국내 여행 횟수는 2019년 3억 4,475만 회에서 2024년 2억 9,183만 회를 기록하며 전반적 감소 추세

- 내국인 해외 여행 횟수는 2019년 2,459만 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위축되었다가 다시 회복하여 2024년 2,463만 회를 기록



Source: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국민여행조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국내 관광 자원 개발 및 여가 시간 확대에 따른 기대감 ↑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특화 산업 육성 방안 구상

-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비전 제시. 강원·제주의 특별자치도화를 통해 지역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광 자원 개발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

평균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주4.5일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4.5일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모습. 주 4.5일제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입법이 2025년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추정

국내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투자 확대

-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따라 관광에 특화된 지역의 관광 자원과 콘텐츠 개발이 촉진되고 관광 인프라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

- 관광지 다양화로 서울 및 일부 도시에 집중되던 기존 여행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동선 및 경험 제공 가능. 이는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 수요 확대에 이어질 전망

내국인 여행 수요 증가 기대, 관광업계 인력난 우려도 상존

- 주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여가 시간 확대에 내국인의 단기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근거리 해외 여행 및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집약적인 관광산업의 추가 인력 고용이 불가피할 가능성. 관광업계 인력난, 인건비 부담 등의 우려 존재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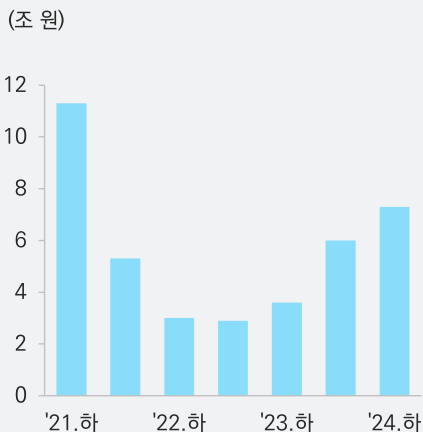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 기반 마련

국내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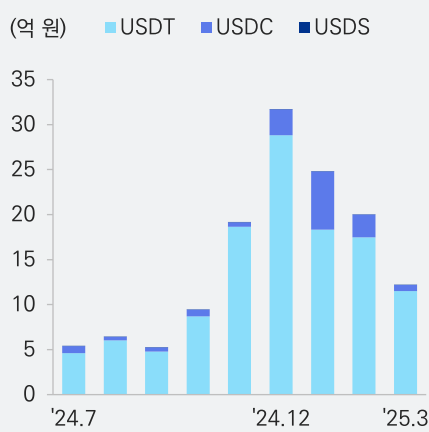
2023년 하반기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증가세인 가운데 최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 증가

- 2024년 말 국내 가상자산 등록 계정 수는 2,002만 개(실제 이용자수 97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7조 원(2024년 6월 말 56.5조 원 대비 91% 증가), 하반기 중 거래규모는 1,345조 원으로 2024년 상반기(1,087조 원) 대비 24% 증가
-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거래된 3종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2025년 1분기 총 56.9조 원에 육박
-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거래 계좌 발급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대금(일평균)



우리나라 월별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



Source: 차규근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25년 3월 기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스테이블코인 기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가능성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디지털자산 연계 금융상품 제도와 및 안전한 투자기회 보장

-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영업·감독까지 포괄하는 2단계 입법 추진
- 디지털자산 현물 ETF 등 금융상품 허용
-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법제화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 추진

✓ 디지털자산이 주류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 도입 시,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투자 편의성 제고
-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범위 확대

✓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 및 산업 확장 가능성

-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둘러싼 플랫폼기업, 금융권, 핀테크 기업 간 경쟁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 증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컴플라이언스 선제적 준비
- 디지털자산 확장성을 고려한 선제적 전사 사업 전략 및 이와 연계된 투자/재무 전략 마련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건설 》 침체된 국내 종합 건설산업의 회복과 안정화 우선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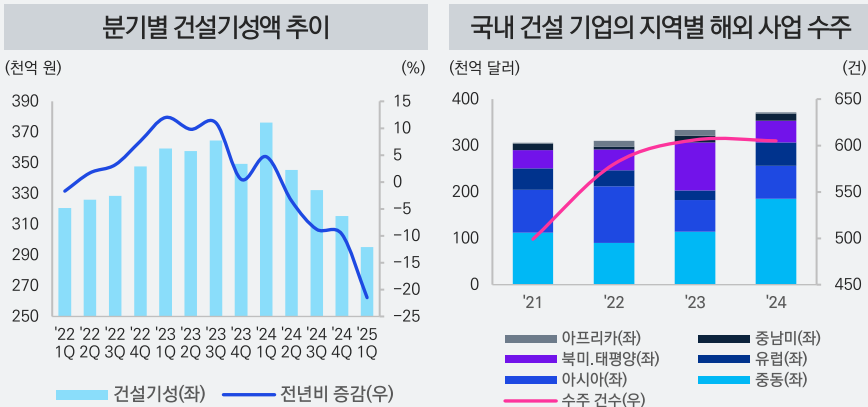
다소 침체된 내수 건설 시장 경기 활성화 동력이 시급

2025년 1분기, 국내 건설기성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5%대 수준

- 2024년 1분기를 기점으로 건설기성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5년 1분기에는 29.5조 원 규모를 기록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적은 수준을 보임
- 동 기간, 전년대 증감률 또한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하며 건설 내수 경기 부진에 대한 新동력 필요성 대두

중동·아시아 중심으로 해외 건설 수주 실적 증가 추세

- 2021년부터 해외 건설 수주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71.1억 달러(605건)를 기록
- 특히 중동 지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내수 건설 경기 위기와 적절한 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및 운영 전략 솔루션이 시급



Source: 국가통계포털, 해외건설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투 트랙(국내·해외 건설) 전략으로 중장기적 산업 안정화 기대

제 2차 추경안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2.7조 원 배정

- 2차 추경(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8.5%를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 예정
-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온 건설 경기 시장 경기를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본격적인 건설산업 회복 및 투자 확대 기조에 대한 신정부의 의지 표명

'건설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설 강국 중흥' 위한 국정과제 가시화

- 스마트건설 기술 인프라 구축,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 확대 등의 정책 지원 기조
- 단순 도급 사업을 넘어 신재생 에너지, 첨단 인프라 등을 건설하는 분야로의 확장을 지향하며 건설산업 생태계 전환을 통한 미래형 건설 비전 제시

✓ SOC 투자 확대와 주택건설 시장 회복을 통해 안정적 건설환경 조성

- 교통 인프라와 같은 국가기반시설건설 사업(GTX-A·B·C 개통 및 착공,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을 우선 진행하여 침체된 공공·민간 건설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부활 기대
- 공적주택 공급의 확대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규제 완화조치로 중단기적 시장 활성화 촉진 기대

✓ 스마트 건설 기술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건설 사업 점유 확대

- 현재 국내 건설 기업은 해외의 가스·정유, 발전 플랜트 구축에 두각을 나타냄
-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건축정보모델링(BIM) 등에 기반한 디지털·자동화 건설 방식이 결합될 경우 긍정적 시너지 효과 기대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외식 》 배달앱 관련 규제 도입 시 외식업체·배달앱·소비자 등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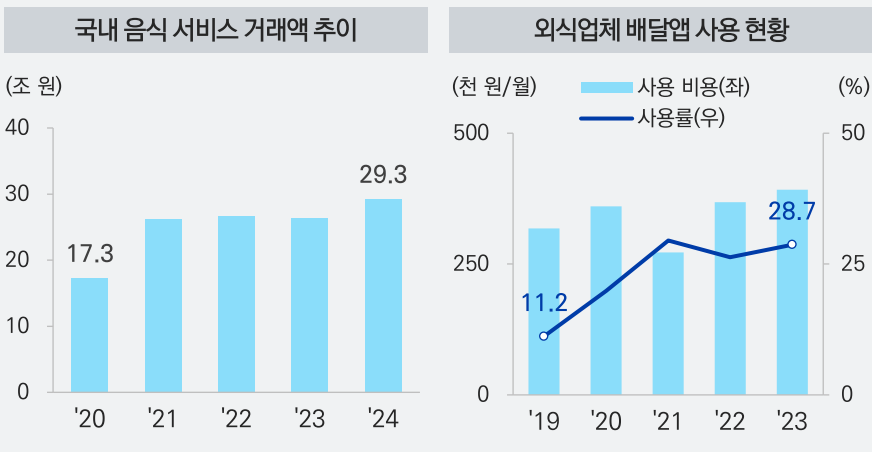
배달 시장 규모 확대 속 배달앱업계 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지속

배달 음식 중심의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 규모의 전반적 확대

-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은 엔데믹 여파로 2023년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되었으나, 배달 외식 선호 기조가 다시 부활하며 2024년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2025년 초 기준 국내 배달앱 상위 3사의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3,700만 명으로 추정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한편 국내 배달앱 시장 내 중개수수료 관련 배달앱업체와 입점 외식업체 간 갈등 지속

- 2024년 정부 주도로 마련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이해관계 대립 지속



Source: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시장 공정성 제고 위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도입 추진

외식 경기 활성화 통한 경기 부양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추진

- 민간 배달앱이 내세우는 값비싼 중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 중. 정부는 2025년 6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6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쿠폰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 중

배달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위해 배달앱 수수료 구조 개편

-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 중. 배달 시장의 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율 부과를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

공공배달앱 및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시장 구조 변화 예상

- 공공배달앱 등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며 시장 경쟁 구도가 다원화될 가능성
- 배달앱에 입점한 외식업체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어 운영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 한편 배달앱업계의 경우 수수료 인하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단기적인 매출 감소가 불가피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금융 ① 》 부동산 금융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

6월 28일부터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적용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축소, 2025년 6월 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쏘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항목	주요 내용
①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당초 계획 대비 금년 하반기(2025.7월~)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 50% 수준 감축(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②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전 금융권 확대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LTV=0%)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1억 원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③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 제한
④ LTV 등 대출 규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80% → 70%) 및 전입 의무(6개월 이내) 부과 -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최대한도 대상별로 축소 조정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현행보다 강화 (90% → 80%)

Source: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5.6.27)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삼성KPMG 경제연구원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 확립

▶ 금융회사에 완충자본 부과하는 자본규제 도입,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 비용 상향 조정 검토

- 은행 등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ectoral Systemic Risk Buffer: sSyRB)의 도입 검토
- 내부모형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 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 표준방법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 단기적 개인 부동산 금융 대출 수요 감소에 따른 은행권 대출 성장 둔화 및 수익성 하방 압력

- 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 자산 성장세 둔화, 이자수익 감소 가능성

✔ 수익구조 다변화 및 중장기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 실수요자 중심 개인대출, 기업대출 등 영업전략 다변화 및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 비이자수익 확대 등 수익 등 수익구조 다변화, 벤처금융 등 신사업 확대와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효율화 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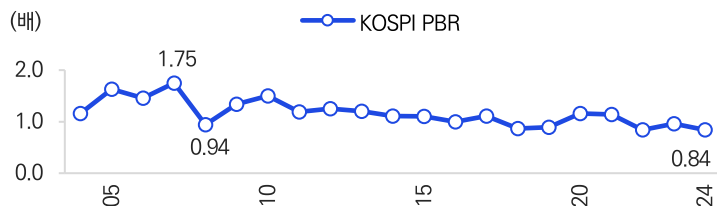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금융 ② 》 주식시장 활력 제고 및 벤처금융 활성화

기업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시장 및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현상 지속,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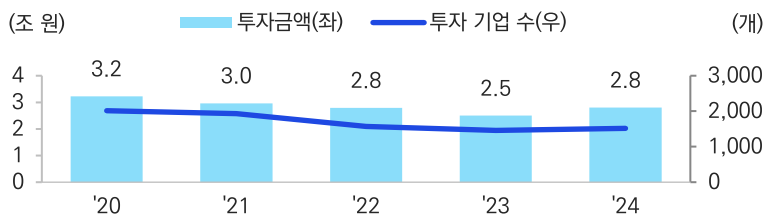


벤처시장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시장 육성 필요성 지속

- 벤처금융 본연의 역할인 모험적 영역에의 민간 투자 환경 조성 및 마중물 역할 강화

- 2025년 들어 ①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②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등 논의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Source: 한국거래소, 한국벤처투자
Note: KOSPI PBR은 각 연도 말 기준

주식시장 및 벤처시장 활성화

주식시장 공정성과 활력 제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범죄 엄단 시스템 보강,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개편 등 퇴직연금 단계적 대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급락 현상 해소

자본시장 내 중소벤처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 및 관계형 금융 등 금융사 역할 강화

- 중소 금융회사들을 위한 공급망금융 플랫폼 구축 노력
- 초대형투자은행(IB)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지원 확대
- 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중소기업 투자·융자·정보생산 등을 결합하여 금융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제고 및 종투사 또는 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

- 기업과 투자자 간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 주주가치 제고, 원활한 자본조달,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 증권사 등 금융사 핵심사업 강화 계기 마련, 외국인 및 개인투자자 대상 상품 강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금융권 신사업 강화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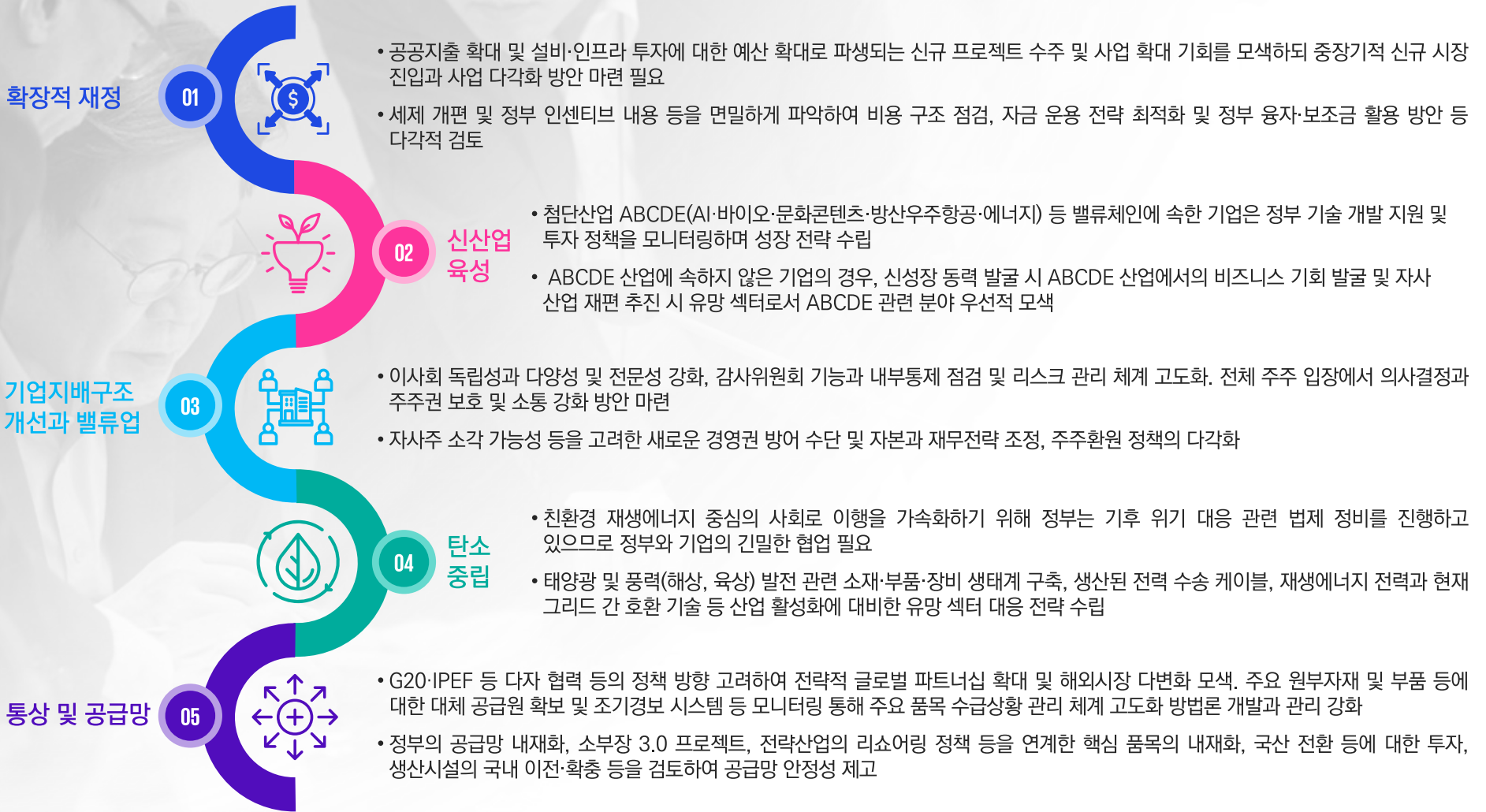
- 벤처기업들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
- 벤처기업 투자 및 대출 등 금융사의 새로운 수익원 확보 준비

Source: 국정기획위원회,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I.	새정부 국정 비전과 방향	3
II.	새정부 주요 경제산업 정책	8
III.	산업별 주요 정책과 영향	15
IV.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32

새정부 주요 경제정책에 따른 비즈니스 대응 전략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산업별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1/4)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된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바탕으로 추후 각 부처별 구체적인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소지가 높음. 특히 AI 투자 확대 등 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각 기업의 적극적 투자도 필요함

산업별 이슈 (정책)



AI

- ✓ AI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가운데 현재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7위권이지만, 정부 AI 정책을 기반으로 1위 미국, 2위 중국에 이어, 'AI 3강(3위권)' 목표 추진
- ✓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과 AI 인프라 구축에는 대규모 자본력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 단위 투자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AI 투자(정부+민간) 활성화 필요



반도체

- ✓ 글로벌 공급망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토대 마련을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및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클러스터 육성 추진
- ✓ 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과 레거시 반도체 경쟁 확대 대응을 위해 국가 주도의 AI 투자를 활용한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 및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 지원 전망



자동차

- ✓ 2024년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3% 미만인 가운데,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으로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 목표
- ✓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범 운영 상태 답보 중인 반면 미국, 중국은 자율주행 패권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미래 모빌리티 중심으로 국내 산업 기반 마련 필요



방위

- ✓ 국내 방위산업은 수출 대상국 다변화 및 수출 무기 품목 다양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달성한 결과 2020~2024년 내 전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상위 10위 기록
- ✓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합하는 등 K-방산의 글로벌 공략 가속화 정책 추진 예정

대응 전략

- ➔ 기업, 정부, 생활 전반에 활용되는 AI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AI 이용자의 활용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AI 서비스 고도화 전략 실행
-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둘러싼 생태계 환경 변화에 적합한 선제적 투자 및 경영 방안 수립 필요
- ➔ 첨단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주요 반도체 전·후방 산업의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화를 기반으로 선제적 시장 확보 전략 도출 기대
- ➔ 소·부·장 클러스터 등 반도체 분야 전·후방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생태계 기업 간 유기적 연대를 통한 안정적 토대 마련
- ➔ 국내 기업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인프라 구축 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가격 경쟁력 확보
- ➔ 자율주행 상용화 및 도심항공교통 실증 본격화를 위한 제도를 통해 관련 데이터 확보를 가속화하여 솔루션 성능 고도화 추진
- ➔ 개별 무기에서 AI 기반 무기체계(솔루션)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 제고 필수적이며 무기 외 MRO 등에서 경쟁력 확보 추진
- ➔ 방위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정부 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이에 기업은 국내 정부와 One Team으로서 원활한 교류 체계 마련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산업별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2/4)

새정부 정책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감세·규제 완화, 보호무역주의 등의 전개 양상과 이에 대한 각 정부 정책 대응 방향을 모니터링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산업 전략이 필요함

산업별 이슈 (정책)	대응 전략
 에너지 ✓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실현 ✓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추진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에 따라 발전을 넘어 송배전, 저장, 관리까지 전 밸류체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 전략 수립 필요 ➔ ICT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와 스마트 에너지 관리 솔루션 적극 대응
 바이오·헬스케어 ✓ 전략적 R&D 투자와 AI 등 신기술 생태계 조성, 제도 개편 및 국산화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성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응급·외상 등 필수의료 기반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계획	➔ 성과 중심의 R&D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제도 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맞춘 전략적 투자로 경쟁력 강화 필요 ➔ 지역 병원, 의료IT, 장비·인프라 등과 연계한 투자 확대와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 수요 대응 및 공공의료 생태계 진입 전략 모색
 물류 ✓ 국내 항만 물동량이 감소하고 글로벌 점유율이 정체된 가운데, 정부는 물류 강국 도약을 위해 항만 경쟁력 강화와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 ✓ 해운기업 본사 이전,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전략, 전문인력 육성 등 지역 중심 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물류 허브 참여 기반을 마련할 계획	➔ 스마트 항만, AI 기반 물류예측, 자동화 창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물류 처리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 확보 ➔ 부산 등 핵심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물류기업 본사 이전, 연관산업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해운·항공사와 연계한 공동 플랫폼 전략 추진
 조선 ✓ 중국의 수주 점유율 확대에 대응해, 정부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전환을 중심으로 조선 경쟁력 회복 전략을 본격 추진 중 ✓ 해운업 탈탄소화에 대응해 정부는 연료공급망 조기 구축과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섰으며, 친환경 기술과 기자재 산업을 기반으로 수출형 생태계 조성 본격화	➔ 친환경 선박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과 함께, AI 기반 선박 설계·스마트 생산공정 도입을 통해 원가 경쟁력과 납기 신뢰성 동시 확보 ➔ 연료공급망 구축에 선제 참여하고, 친환경 기자재·엔진 모듈 국산화를 통해 밸류체인 내재화 및 수출형 기자재 전문기업으로 포지셔닝 전환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산업별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3/4)

5국 3특 중심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K-컬처 및 이와 연관된 산업, 관광 등 국내 경기 회복과 새로운 산업 특화 전략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정책과 연계된 사업 기획 포착이 요구됨

산업별 이슈 (정책)	대응 전략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국내 콘텐츠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며, 콘텐츠산업의 도약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 정책금융·세제 지원 강화 시행 예정 - K-OTT 콘텐츠 및 플랫폼 육성 및 국내 콘텐츠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정책 지원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추진	- 기업은 공공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획·제작·유통·투자 각 영역을 전문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기회로 활용 -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스케일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업의 글로벌 전략 재정립이 필요
관광 - 정부는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의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장려 -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광역 지자체 및 지역 거점 도시로 분산 구축하며,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여행·호텔업계는 지역 콘텐츠 연계 상품, 위케이션 상품 개발 등 관광 상품을 다변화하며 정책 및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관광산업 인력난 우려가 일부 제기되는 가운데 AI 자동화 기술 도입 등으로 중장기적 운영 효율성 제고 도모 필요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영업·감독까지 포괄하는 2단계 입법 추진에 따라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디지털자산 연계 금융상품 제도화 전망 -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둘러싼 플랫폼기업, 금융권, 핀테크 기업 간 경쟁 가속화	- 재무·투자 전략이자 사업 전략으로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선제적 사업 준비. 재무적 영향도 파악, 기술적 인프라/내부통제 등 마련 - 스테이블코인 라이프사이클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정책 모니터링을 해외 진출 전략 고도화
건설 '25년 1분기 건설기성액은 전년비 -21.5%로 5년 내 최저이며 내수 부진 대응을 위해 2.7조 원 추경이 편성되고 SOC·주택·스마트기술 중심의 활성화가 추진 중 '24년 해외 수주는 중동·아시아 수요 확대에 따라 11.4% 증가한 60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스마트건설 기술 기반의 고부가 프로젝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 스마트건설 기술 내재화와 ESG 기반 설계·시공 역량을 강화해 공공 SOC 및 주택 프로젝트 중심의 기술 차별화 전략 추진 - 중동·아시아 발주처 맞춤형 설계·조달·시공 통합역량 확보, 현지 파트너십 및 금융조달 연계 강화로 수익성 중심 글로벌 사업모델 구축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산업별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4/4)

일부 강화되는 새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신뢰 구축의 계기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산업별 이슈 (정책)



외식

- ✓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배달앱 입점업체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 개편 등을 논의 중
- ✓ 한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시장 내 공정 질서 확립이 기대되나 배달앱 수수료 규제가 플랫폼 기업과 라이더,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수익성 악화, 근로환경 변화,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동반할 우려 제기



금융

- ✓ 은행 등 개인 부동산 금융 중심의 수요 감소에 따른 은행권 대출 성장 둔화 및 수익성 하방 압력,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 기능 강화
- ✓ 주식시장 활력 제고 및 벤처금융 활성화 등 모험자본시장 내 원활한 자본조달,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가능

대응 전략

- ➔ 배달 플랫폼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소액 주문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면제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입점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가능
- ➔ 외식업체 대상의 메뉴 개발 및 가격 전략,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컨설팅 사업 등으로 부가 수익원 확보 노력 필요
- ➔ 실수요자 중심 개인대출, 기업대출 등 영업전략 다변화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 증권사 등 금융사 핵심사업 강화 계기, 외국인 및 개인투자자 대상 상품 다변화와 벤처기업 투자 등 금융사의 새로운 수익원 확보 준비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재명노믹스, 중장기 주요 유망산업 내 이해관계자 선제 사업 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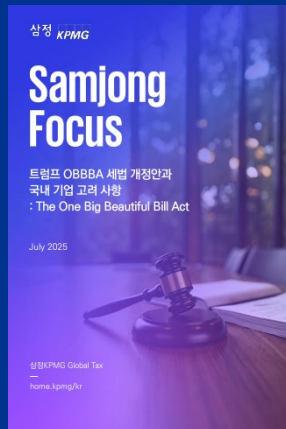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See other Business Reports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며, 기업이 직면하는 경영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 발간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발간

트럼프 OBBBA 세법 개정안과 국내 기업 고려 사항



Contents

- I. OBBBA 법안 주요 내용
- II. OBBBA가 미국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기업 대응 방안
- III. OBBBA에 따른 국내 산업 대응 방향
- IV. OBBBA 주요 세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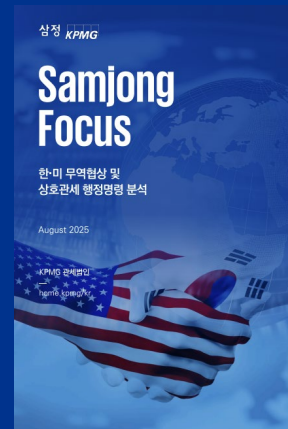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2025년 8월 발간

한·미 무역협상과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Contents

- I. 미 행정부 추가 관세 부과 Timeline
- II. 한·미 무역협상 내용 분석
- III.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Business Contacts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권영민

부대표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한상일

부대표

T 02-2112-0832

E sangilha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게임·엔터테인먼트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제조·공공·인프라산업

황재남

부대표

T 02-2112-7609

E jaenamhwang@kr.kpmg.com

제조·에너지산업

노상호

부대표

T 02-2112-7626

E sanghoroh@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